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내년도 예산 지방우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강기정 시장, 수도권 거리 비례 지방소비세율 배분 제안 김영록 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강력 주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 분권 확대 등을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

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은 지방재정 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

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지방4대협의체),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안건을 협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비수도권 예타 완화·재원 배분 개선 필요”

문인 복구청장, 국정설명회서 이재명 대통령에 건의

문인 광주 복구청장(사진)은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와 재원 배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청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현재의 수요가 아닌 미래까지에 기반한 투자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경제성 지표로 수도권과 비



수 중심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특별회계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에 배분된 보조금은 1597억원(재정력 지수 1.032)에 달한 반면, 광주는 1405억원(0.581)에 그쳤다.

문 청장은 “재정력이 약한 지방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격차 해소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재원 비중을 확대하고 인구·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또 호남권 벤처투자 환경의 열악함을 언급하며, “호남권은 ‘5급 3특’ 권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투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호남권 누적 벤처투자금액은 3383억원으로, 수도권(20조8695억원)과 중부권(2조8234억원), 동남권(1조304억원), 대경권(1조100억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는 “호남권에는 지역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이 유일하다”며 “대형 금융기관의 무관심 속에 펀드 출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권역별 최소 투자 쿼터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투자를 의무화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당정 “예산 늘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북극항로 인프라투자·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충키로

당정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늘려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당정 협의에서 20조35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완 방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북극항로 인프라투자·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충키로

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어구·부표 보충금제와 관련해서는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방안 등이 이날 검토됐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비롯해 △농지법 △농협법 △가족친화법 △공익직불법 등이 거론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북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극장, 국가문화유산 등록해야”

홍기월 시의원, 현존 최고 단관극장…“반드시 성사”

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사진)은 12일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극장 국가문화유산 등록을 반드시 성사시켜, 도심 공동화로 침체한 충장로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극장은 1935년 개관해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단관극장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광주의 근현대사와 문화·예술의 역사를 함께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홍 의원은 “광주극장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소성’과 ‘문화·예술적 상징 가치’가 높아 등록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 가치를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국가유산청에 광주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현장 실사와 자료 요구 등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가 동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지 문제에 함께 지적했다.

광주시는 동구 지산동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부지가 4년간 방치됐고, 내년엔 문체부 타당성 용역이 시작돼도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현대미술관 건주 불일 개관 후 죽었던 상권이 되살아난 사례를 언급하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송기 기자 sky@

도, 반려견과 떠나는 ‘남도한바퀴’ 운영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한다.

반려견 동반 여행코스는 11월 한 달 동안 금·토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코스는 14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등 화정원과 도림사, 15일 강진-보성-강진만 생태공원과 울포해수욕장, 21일 순천-드라마세트장과 오천그린광장, 22일 구례·담양-섬진강대나무숲길과 담양 소재원이다.

최근 반려동물들 가족처럼 여기는 ‘펫

족(Pet+Family)’이 늘어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코스는 반려견과 함께 남도의 자연과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이다. 왕복 교통비, 식·음료,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된 5만원의 합리적 요금으로 운영된다.

1박 2일 여행상품은 광주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남 산이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아쿠아플라넷 등 전남 동·서부권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11월 15일, 22일, 29일과 12월 6일, 13일 등 총 5회 운영한다.

박정렬 기자